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실태

조 계 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 론

IMF를 겪은 이후 최근 몇 년간 우리경제는 여러분야의 신속한 구조조정의 진행 등으로 '98년부터는 경기가 회복추세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기불안과 경제불안정 등으로 인해, 소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실물 경기는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예측도 정책당국은 낙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나 업계, 연구소들은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 편이다.

이와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경제도 경기도와 경북 등 일부지역의 약간의 회복

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 총생산이 줄어들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IT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91년부터 지방의회제도를 시작하였고, '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완성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체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 재정권, 조례제정권 등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양되어 있지 않고, 상당량의 중앙정부의 업무만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절름발이식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상당수의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지

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인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60%에 못미치고 있고,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치단체들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세제의 신설이 불가능하여 세수가 한정돼 있고, 최근의 경기부진으로 부동산 세제중심의 지방세 구조로 인해 세수증가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장들은 선거를 의식하여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시적인 투자증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21세기는 인터넷 혁명이 세계를 변화시켜 모든 분야에 개방화,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므로, 모든 조직의 지식과 정보화 정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도 의식있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와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최근 우리나라 지방경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처방도 마련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경제현황과 지방경제

1. 우리나라의 경제현황

금년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평균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경기둔화세에 따른 국제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증가되므로 세계경제의 경기둔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재중 원유는 산유국들의 합의로 인해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할 것이나, 원목, 원사 등은 세계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금 등 귀금속류는 불안한 금융시장으로 인해 가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내경제는 정부의 4대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되겠지만, 미미한 외부충격에도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권에서의 신용경색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국내경기의 불안한 양상속에서 금년의 평균 금리는 3년만기 회사채 기준으로 8.1%, 원화환율은 달러당 평균 1,240원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금년 경제성장률이 3.8%대에 머물러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최종소비지출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평균 3%대의 증가세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구조조정의 지속,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폭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증가세가 위축되어 전년대비 4.3%감소하는 급격한 침체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금년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증액,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시행, 서울시 재건축 진행 등으로 1.4%정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00년 하반기중 국제유가의 강세,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에 의해 가중된 물가상승 압력이 금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의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물가 상승세가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각각 4.5%,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생활물가의 안정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방경제의 현황

최근 정부당국이나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제의 침체현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 들어서면

서 정부에서는 경제회생과 실업자를 축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가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적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사업보다는 전시성 복지사업에 예산지출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외부요인에 의존비율이 높고 차별화 전략이 부족하므로 비전이 없고 전략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제도는 소지역주의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채용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의 일사분기 지출정도를 살펴보면 '97년의 67%, 2000년 52%에 비해 2001년에는 66%로 나타났다지만,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97년의 67%에서 최근들어 60%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더군다나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정도이며, 전국자치단체중 144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특히 현시점은 민선2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정측면에서 문제점을 평가하고 민선3기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때이다.

한편 최근의 지방경제를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경기, 경북의 일부지방의 통신, 영상산업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부산의 섬

<표 1> 지역경제지표 증감률

(전년동기비, %)

	제조업생산	실업률	어음부도율
경기	17.3	4.6	0.34
인천	-18.7	5.3	0.81
강원	-3.7	3.7	0.31
경북	5.0	3.1	0.54
대구	-7.3	5.5	0.54
부산	10.0	6.7	0.54
전북	-9.6	4.0	0.54
광주	2.0	6.1	0.46
충북	-3.0	4.0	0.25

자료: 한국은행 조사국, “최근의 지방금융경제”, 2001.5

유·신발산업, 강원, 대구, 인천의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산업 등의 생산량이 대부분 '95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산업생산지수도 전년동기에 비해 2001년 1월에 인천이 21.2, 대구가 13.9, 강원이 11.2, 전북이 11.1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지방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업의 흡수력이 가장 높은 지방 건설업은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회복이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공사부진과 지역의무도급제의 추진 실적저조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부산이나 광주 등은 실업률이 6%를 넘어섰고 어음부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0.54%로 나타나, 이들 지역경제가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 매우 우려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1> 참조)

3. 지방자치와 지방경제

우리나라의 지방경제는 건설, 섬유 등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역내의 이런 업종의 주력기업들이 퇴출되거나 부실화되어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지방산업 구조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민선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주민복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중심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비록 중앙정부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의 구조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의 건설, 부동산 등의 활성화 정책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확고한 의지부족과 수요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나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경제의 변화요인 및 상대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제도 이후 경제발전이 없거나 퇴보한 지역은 타지역의 성공적인 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비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자치단체비전은 그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고 재정력에 걸맞게 설정되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방의 고유한 입지적, 지리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융화와 접목도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된 후 정책실행

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III. 우리나라 재정현황 분석

1. 정부의 지방경제에 대한 정책운동

정부는 금년들어와 지방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은 물론 IMF이후 최악의 사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자치단체 사업예산 20조를 지방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되 상반기에 80%이상이 투입되도록 추진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특별교부세, 양여금 등도 소규모 지방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등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실업자 구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는 등 ‘지방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경성 예산은 구조조정차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절감된 예산은 예산전용, 추경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지역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생산성과 고용증대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허가 관련 법령과 자치단체의 규칙 등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IT·BT 등 지역전략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의 자발적 성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창업보육센터, 벤처투자펀드, 지역

정보화 등 벤처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벤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벤처창업동아리 및 연구소의 우수창업아이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년들어 일사분기의 지방 중소기업체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생산성 지수도 전년도 동기에 비해 낮아지고 평균가동율도 떨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자금사정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조원을 조기지급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금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조기구매를 실시하고, 지역우수상품 전자상거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지역별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는 지역경제의 과급효과가 큰 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지역의무공동 도급비율의 상향조정, 지역제한입찰제도의 개선, 하도급대금지불제 활성화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지방경제의 윤택유 역할을 하는 유통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투입하는 등 경제활성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즉 지방중소 유통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점과 차별화된 지역별 전문·특화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

래시장의 기능을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또한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마련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이 이룩되도록 산업현장관리에 각 노동청이 앞장서고 있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공익성·생산성이 큰 사업부터 시행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중 가장 중요한 지방의 물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별 물가관리 실적평가를 정례화하고, 시민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연간 분산 조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세수현황

(1) 중앙정부 재정지출현황

중앙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2000년하반기 이후 재정의 조기지출과 예산의 상반기 투입증대에 노력하여, 금년 3월말까지 연간 전체예산의 60%수준인 65.2조원을 배정하였다. 이는 2000년보다 9.3%증가된 것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집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여러경로를 통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활성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으로 정부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등 주요 투자사업예산의 경우, 3월말까지 21.8조원중 68.3%인 14.9조원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졌다. 공사계약도 3월말까지 연간예산의 51%인 11.1조원이 이루어져, 전년의 7조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상자금배정도 전년도 보다 21%증가한 6.1조원이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추세는 2001년도 예산이 늦게 편성되었고 폭설과 한파가 심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빠른 집행이라고 평가된다. 이와같이 3월말까지 공사계약 등 지출준비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하절기에는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국세 징수실태

국민경제 활동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세징수상황을 분석해 보면, 우선 2000년 연간통계에 의한 총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6.5%증가한 92.9조원이 징수되어 13.2조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거시경제 지표중 경제성장률의 호조와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강화 등으로 소득세가 증가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의 감소와 정보통신산업의 호황 등으로 인해 기업실적이 호전되어 법인세가 1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뿐만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증권거래대금이 급증하여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내구성 소비재의 소비증가로 특별소비세가 증가하였다.

한편 2001년 4월말까지 국세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36.2조원으로 전년동기의 36.4조원에 비해 0.4% 감소하였다. 이 세수실적으로 연말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5년간 평균치인 35.1%를 넘어서고 있어,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하리라 평가된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부가가치세의 세수증가는 환율상승과 카드사용 증가에 기인하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및 주세의 세수증가는 각각 경유와 맥주 등의 출고량이 증가한 것과 세수이월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2000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과 환차손으로 기업이익이 감소한 때문이고, 소득세 감소는 이자소득감소와 부동산 거래축소에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소비세의 감소는 증권거래소 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 축소에 기인한 것이다.

<표 2> 국세 징수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0.4까지	2001.4까지	증감
소 득 세	51,143	51,016	-127
법 인 세	69,155	59,538	-9,617
부 가 가 치 세	110,533	116,667	6,134
특 별 소 비 세	12,250	13,743	1,493
교 통 세	34,008	43,935	9,927
주 세	7,619	9,673	2,054
농어촌특별세	7,987	5,159	-2,828

자료: 재정부 조세정책과, “2001년 4월까지 세수 실적분석” 2001.6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세수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회생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금년들어와 지방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지출도 최대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사분기까지 추진실적을 전국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통계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원도의 경우를 사례로 분석했다.

강원도 본청의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의 경우 3월말까지 42%만 배정되었으나, 2001년에는 57%가 배정되어 약 2,000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가 경기부양에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작년과 차이가 거의 없으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사업예산은 20%정도 증액되었으며, 특히 자체사업은 28%정도, 보조사업은 20%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액은 약 4%정도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사업예산과 자체사업예산의 배정액이 각각 5%, 1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강원도의 경기부양 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강원도의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강원도 본청의 예산은 강원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현황

(강원도청, 백만원)

구 분	특 별 회 계		일 반 회 계	
	2000.1/4	2001.1/4	2000.1/4	2001.1/4
총 예 산	38,598(61.8)	35,324(65.7)	534,424(42.0)	722,801(56.9)
경상예산	2,260(54.6)	2,114(51.3)	90,321(53.9)	85,240(54.1)
사업예산	35,999(62.1)	33,009(66.9)	408,685(40.0)	517,803(60.0)
보조예산	33,886(61.9)	31,363(66.4)	341,949(40.1)	439,925(59.5)
자체예산	2,112(66.1)	1,646(77.9)	66,735(35.5)	77,878(63.1)

자료 : 강원도청 예산담당관실, 내부자료

주 : ()내는 %를 나타냄.

(2) 지방세 징수실태

지방경제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시도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의 경우 시도별로 대체로 부과액대 징수율이 95%내외를 나타내어 적절한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2000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비해 전국적으로 111%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도별로 구분해도 징수율이 100%를 대부분

초과하므로 세수입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주민세나 면허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징수액이 부과액의 95%수준에 육박하여 세수가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0년의 경우 특히 당초예산에 비하여 대부분 100%를 초과하여 징수되어 세수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군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100%에 미달하여 징수노력이 부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현황

(강원도청, 억원)

구 분	2001. 1/4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비율(%)
도 세	1,473	736	50.0	95.5
취득세	154	134	87.0	84.8
등록세	269	268	99.6	109.8
면허세	13	11	84.6	24.4
시군세	757	309	40.8	99.0
주민세	87	63	72.4	98.4
자동차세	9	8	88.9	160.0
주행세	21	21	100.0	150.0
도축세	6	6	100.0	85.7
담배소비세	181	181	100.0	92.8

자료 :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내부자료

주 : ()내는 %를 나타냄.

족하였거나, 세원발굴에 소홀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1년에 들어와 3월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상황을 강원도를 예로 살펴보면, 도세는 18%, 시군세는 10%정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작년도에 비해 몇 개의 세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세인 취득세가 작년동기에 비해 85%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부동산 매매가 감소한 결과이다. 시군세의 경우는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감소와 경기위축으로 도축세나 담배소비세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징수노력의 확대에 의해 전년도보다 50%이상 급증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와 군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시세입이 군보다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지역 주민들의 납세의식부족과 시의 징세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중앙정책 당국의 지방경제에 대한 인식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경제의 회복과 실업률 축소를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촉진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완화, 화성신도시 건설사업추진 등 수도권 중심의 개발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여 수도권의 집중현상을 오

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금년 3~4월 민주당이나 재정경제부 등이 나서서 지방경제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 애썼다. 그러나 중앙정부 당국자들이 지방에서 살아보지 않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일부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묵시적으로 찬성하는 등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현상들을 노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재정규모는 중앙재정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상태이고, 세수실적도 국세에 비해 지방세는 30%정도로 매우 작으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만으로는 지방경제 회복에 한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중앙의 정책당국들은 지방의 상대적인 소외나 경제적 취약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정책들을 추진하여, 일부 의식있는 학자들은 국내에서 ‘남북문제’의 발생을 우려하는 논란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수치상만으로도 금융의 약 60%, 인구의 45%, 교육기관의 약 50%가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경제에 관련된 사안들도 대부분 의사결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

만아니라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중심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져, 지방이나 중소기업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그 예가 최근 정부의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도 '9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중앙정부들은 규제완화의 명목으로 상당부분의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이나 세정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왜 어려운지 등 현황과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협의제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따라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시성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경제와 재정은 동시에 부실화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의 경제 및 재정문제를 협의·조율하는 '지역경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관련 지방경제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된 사안은 정부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정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지방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질적인 의결기구

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와 지방세를 재검토함과 아울러 지방재정조정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방재정자립도가 최소한 60%이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한 자치단체당 한가지 독립세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청, “2000년 시도세 징수실적”,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1. 5
- ,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실적”,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1. 5
- , “강원도 예산항목별 배정상황”, 강원도청 내부자료, 2001. 5
- 김정호, 『최근 지역경제 산업 상황과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2001. 4
- 박용규, 『지역경제현안과 발전모델모색』, 삼성경제연구소, 2001. 3
- 재정경제부, “2001년 4월까지 세수실적분석” 보도참고자료, 2001. 6
- , “지역경제활성화 기본지침”, 2001. 1
-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01. 5
- , “2000년 국세세입 분석”, 2001. 2
- 한국은행 조사국, “최근의 지방금융경제”, 한국은행, 2001. 5
- 행정자치부, “지자체 '98년 재정상황 종합 분석 결과”, 보도자료, 1999. 12